가업승계, '부의 대물림' 인식 전환돼야

노노(老老)상속 해결하는 실효적인 정책 마련 강조

윤병섭 (사)가족기업학회 학회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서 가업승계 과정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2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들이 느끼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주주에게 붙는 할증까지 포함해 최고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윤병섭 (사)가족기업학회장은 "가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자산이 소멸된다"며 "이미 다수의 해외 국가가 상속세를 완화·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한국 역시 경영권 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기업 경영 현안 해결에 매진

(사)가족기업학회(이하 학회)는 2021년 창립 이래 질적, 양적 학술연구로 유의미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전문학회로서 가족기업의 창업 및 경영에 관한 이론과 실무, 정책연구를 이어가며, 화목한 가족과 튼튼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제2대 회장으로 학회를 리드하고 있는 윤병섭 학회장은 "최근 가업승계나 상속세제 등 가족기업의 경영 현안을 반영한 연구 진작이 이어지고 있다"며 "학회는 가족기업 이론과 정책 개발 및 관련 연구, 가족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학술 연구와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최신 지식을 전달하고 소통의 장을 구현하는데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가업승계 ▲기업경영 ▲상속세제를 주요 연구 분야로 새로운 사회 변화와 이슈를 빠르게 발굴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술연구 이외에도 가족기업 활성화 분야 멘토링, 컨설팅 전문가 육성, 경영 자문, 가족기업 관련 교육,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해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는 중이다.

앞서 학회는 춘계학술발표대회를 통해 '대전환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가업상속의 효과,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등을 제언하며 정책 변화를 이끌었다.

"본 학회는 가족기업의 승계가 부(富)의 집중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부정적 사회 인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논문집 「가족기업연구」 발간에 이어 오는 30일 개최하는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도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해 긍정적 인식 변화를 도모하는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가업승계, 기업 경영 혁신의 초석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2021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CEO의 평균 연령은 54.8세로, 60세 이상의 비율은 31.6%이며 70세 이상 비율 역시 5%에 달했다.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베이비붐 세대 창업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은 2세대 혹은 3세대 경영자들에게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다.

가업의 승계는 가족경영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소유권과

▲2023 (사)가족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2023년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경영권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가족이나 친인척 등 혈연에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가업승계는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기업 가운데 승계가 완료가 된 기업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는 법적 · 사회적 ·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승계는 경영 자원의 분산과 소멸을 막는 동시에 젊은 경영자가 가업을 이어받아 혁신할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적응할 새로운 사업 역량을 키우면서 국가적으로도 성장 동력을 얻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촉진과 활성화 지원특별법 제정돼야

윤 학회장은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승계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와 가업승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로는 가업승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가업승계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노(老老)상속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가업승계 촉진과 활성화 지원특별법' 제정 등 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간 부의 집중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부정적 사회 인식을 의식해 정치적 관점에서 지원제도가 설계 · 운영돼 왔습니다. 한발 앞서 상속 · 증여세를 폐지한 스웨덴의 경우 가업승계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초고액자산가들의 조세회피 전략의 틈을 없앤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용자 중심의 상속 · 증여세제 개편으로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를 이룬 OECD 회원국을 벤치마킹해 가족기업의 경쟁력 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족기업 혁신 위한 실사구시 연구 이어갈 것

윤 학회장은 실무적 역할을 맡아 발로 뛰면서 학회 창립과 사단법인 설립에 기여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하는 중소기업뉴스에 칼럼 연재를 통해 가족기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 전환에 앞장서 왔으며, 상속 및 증여세 개편과 노노상속 문제 해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혁신 DNA를 가족기업에도 이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족기업도 업종 전환이 아닌 일하는 방법과 출시하는 제품의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선진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연구 철학을 견지하며, 가족기업 분야의 연구와 업계의 경험을 연계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로써 가족기업 이슈를 성과로 환류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윤 학회장은 가업승계가 부의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부정적 사회 인식을 전환시키고, 가족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 실현의 필요성을 알림으로써 법 제정을 통해 젊은 가족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가족기업의 혁신을 위해 힘쓰는 (사)가족기업학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NR 뉴스리포트 = 김은비 기자

profile

卒 경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現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사)가족기업학회 회장
(사)한국경영학회 부회장

前 한국전력학원(수도공업고등학교) 개방이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비상임이사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혁신관리평가단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주관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사업평가위원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위원
행정자치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평가위원